

필요광장



최 지 호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일할 생각과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 한다. 실업은 누구라도 생각하기 싫은 고통이며, 이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정책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자리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미래 일자리는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그 변화에 선제적으로 적응하려는 노력에 의해 창출될 수 있다. 미래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로 2016년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WEF)에서 핵심 주제로 다루어진 ‘4차 산업혁명’을 들 수 있다.

법조칼럼



이 건 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31일 창립 28주년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52명의 81%(5306명)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11조)이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아마도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비위 사실과 이를 두고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기 억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에 더해 며칠 전에는 끝 간 데 모르고 가지를 뺏아가던 정운호 게이트가 현재 부장판사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4차 산업혁명과 지역의 미래 일자리

올해 다포스포럼에서 내놓은 ‘미래 고용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앞으로 어떤 직업이 생겨나고 사라질 것인가를 예측했다. 구체적인 직종별 미래 일자리의 증감 예상은 차치하고, 앞으로 5년간 전 세계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21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이 기간 중 500만 개의 일자리가 순수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새로 발생하는 실업은 단기적·마찰적 실업이 아닌 구조적·항구적 실업이라 할 수 있다. 국가와 기업들이 발 빠르게 4차 산업혁명에 시대에 걸맞은 산업 재편과 그에 적합한 고용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만성적인 고용 불안으로 경제·사회·정치 등 전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글로벌 은행 UBS는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연성’이며 노동시장, 교육 시스템, 사회간접자본, 법률 제도 등의 분야에서 높은 유연성을 갖춘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특성과

각 국가의 현재 상태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분야별 가중 평균 종합 순위에서 한국은 25위(노동시장 유연성 83위, 기술 수준 23위, 교육 적 용력 19위, 인프라 스트럭처 20위, 법적 안정성 62위)를 기록했다. 미래 전망까지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중기기관을 통한 기계적 혁명(1차 산업혁명),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생산(2차 산업혁명),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3차 산업혁명)를 거쳐 최첨단 기술들의 융합화를 통해 실재와 가상의 통합 및 제품의 자동화·지능화(4차 산업혁명)의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 4차 산업혁명은 국가·기업·개인 모두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4차 산업혁명의 속도와 범위를 이해하고 선행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치열한 생존 게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경쟁에서 덩치(Big Fish)가 중요 역할을 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덩치보다 민첩성이 더 중요하다. 민첩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패스트 피시(Fast

Fish)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구조적 변화 초입에 들어섰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밀려오는 큰 파도에서 지역의 미래 일자리를 위해 유연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할 시점이다. 현재의 지역 내 현 산업구조와 4차 산업혁명과의 불일치 영역 및 수준을 냉철하게 분석함과 동시에 적응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지역 내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한 미래 일자리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훈련을 시켜야만 지역의 미래 고용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일자리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지역의 미래를 그려 보며,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이해 관계자들의 시대적 책무와 더불어 유연함과 민첩함을 기대한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로까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이제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모양새이다.

학부에서 법학이 아닌 동양사학을 전공하였고, 졸업 이후 4년여 간의 직장생활 끝에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것 또한 사법시험이 아닌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였다. 지난 3년 반 동안의 법조 경력 전부를 오로지 변호사로서만 활동해 온 필자에게는, 남들에게 전분을 과시할 만한 검사나 판사 친구 혹은 선후배가 아직 없다. 만약 검사의 처분이나 판사의 판결이 담당 변호사와의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면 결코 득을 볼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필자로서는 지난 3년 반 동안 약 240건의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로스쿨 출신으로 담당 검사, 또는 판사와 아무런 친분이 없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내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한 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다. 필자가 그 동안 변론한 사건의 승소율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지

만, 적어도 아직까지 필자가 변론한 사건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의뢰인이 먼저 항소심을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고 싶다고 한 경우 역시 한 손에 꼽는다.

필자가 뛰어난 변호사여서가 아니다. 필자가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들의 경우, 우선 사실관계 자체가 그러한 결과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이었고, 그에 더해 필자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판단자인 판사 또한 마찬가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최대한 꼼꼼하고 성실하게 변론했던 것 뿐이다.

흔히 변호사 윤리와 관련해 “악인도 변호관을 권리가 있다”는 말을 하곤 한다. 맞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문맥 그대로 자신이 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혹은 자신이 행한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본인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법을 빠져나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독자께서 만약 올 한해 대한민국을 뒤쫓고 있는 정운호의 사례와 같이 본인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까지 범망을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정운호가 어떤 변호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참고하시라는 말씀 외에 달리 드릴 조언이 없다.

하지만 독자께서 필자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처음으로 사건을 맡겼던 의뢰인이 “저 말고도 아시는 변호사님들 많이 있으실텐데 왜 저한테 맡기셨어요?”라고 묻던 필자에게 해주었던 이야기, “이제 시작하는 분이니깐 정말로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험 이 부족해서 모르시는 게 있으면 선배 변호사님들께 물어봐서라도 처리하실 테니까, 그런 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구요”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우리 토양에 맞는 지방행정·정치 뿌리 내려야

다. 지방 살림의 감시보다는 이권개입으로 당선무효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한 중앙정부와 정치의 간섭을 받거나 인사, 임찰비리 등에 휘말려 중도 하차하는 것을 많이 봐 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논의와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한국의 토착적인 행정이란 정립이 시급하다. 미국 등에서 도입된 정치·행정 이원론, 일원론, 공공선택이론 등인데 우리에게선 잘 맞지 않는다.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 온 왕권 견제제도와 합의제 정부, 실학사상 등 우리의 전통 정치 문화 계승, 통일을 대비하는 한국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지방행정학’ 이론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이고 중앙집권적 요소가 많은데, 정부와 의

회는 대립형 형태(별도 선출, 구성)를 띠고 있어 중앙, 지방할 것 없이 여-야 또는 중앙-지방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의 인사, 재정, 사무 등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이 시급하다. 국가 권력형태를 내각책임제, 준대통령제, 기관연합 형태(의회가 단체장, 집행부 겸직) 등에서 장점을 살리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최근 제기되는 정부형태 개편과 개헌 논의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행정기관의 공직 신분(행정직)이면서 정당 소속(정치직)의 2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감시가 절실하다. 정실인사, 공사임찰 등 개입을 통제하기 위해 부단체장의 역할 강화(업무 분담 법제화) 또는 내부 견제제도 도입,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지역의 정책결정과 공약실적 평가, 주민참여 내실화 등 보완이 시급하다.

이런 경우 112로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여성 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가정폭력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대물림 되는데 체벌을 경험한 아이는 폭력성향을 갖게 된다고 알려졌다. 폭력 남편의 70% 이상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싸우는 광경을 보고 자란 폭력 가정 출신이라는 점에 우리 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핵심이 되는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

넷째, 지방선거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므로 정당과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 예측되고, 돈이 많이 드는 선거라는 지적이 많다. 실력 있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쉽게 정치에 입문할 수 있도록 정당공천제를 추천제로 전환 등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지방의 재·보궐 선거는 상당기간 결석 상태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원인 제공자의 친인척이 입후보하여 당선되는 모순이 있다. 예컨대, 미국처럼 당해 지방선거의 차점자를 ‘당선 승계’하는 방안을 확대·도입해 볼 만하다.

오늘날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도 튼튼해질 것이다. 행정도, 정치도, 사회도, 우리 모두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은 역사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가?

해 폭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으로 가정 이 파괴 된다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인해 사회문제가 되고 후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이족부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관심의 날로 매월 8일을 ‘보라데이’로 지정한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사회가 건강하려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폭력없는 가정 이 이뤄져야 한다.

▲전상철·광주시 남구 주월동

社 說

학점 부풀려 아무에게나 장학금 주었다니

서민 가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국가장학금이 줄줄 새고 있다. 학생들의 학점을 부당하게 올려 장학금을 준 광주·전남 대학 1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교육부 감사 결과 광주의 한 대학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4년 2학기까지 수업시간 미달로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 175명에게 무더기로 B+에서 D까지 학점을 높여 주었다. 이에 따라 2012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직전 학기 성적 기준(80점)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32명이 국가장학금 4800여 만 원을 받도록 했다. 또 전남의 한 대학은 2012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출석 부족으로 F학점 대상인 10명에게 C~D+ 학점을 줘 이중 1명이 2015년 2학기 국가장학금으로 240만 원을 수령했다.

전남의 또 다른 대학은 2015년 1학기에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 F학점 처리해야 할 학생 13명에게 높은 학점을

주었고 이 중 2명은 2015년 2학기에 각각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대상자가 됐다. 이 대학에서는 2012~2015년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488명에게도 교내 장학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지급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준 대학도 있었다.

지적된 곳은 대부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 지방대학들이다. 심각한 총원난으로 존립마저 위태로워지자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한 명의 학생들이라도 더 붙들어 보려 하다 보니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일탈을 초래한 것이다.

그렇지만 학생들을 몰라라게 이끌어야 할 대학이 거리낌 없이 비위에 얹장서는 것은 스스로 위상을 깎는 행위이니 무슨 말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게다가 예산 낭비도 만만치 않다. 대학들은 학사관리를 더욱 엄정하게 하고 철저한 감독으로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도덕적 하자 무시한 채 장관 임명 강행한 정부

청문회만 했다 하면 공직자들의 파렴치한 행적이 줄줄이 드러난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특혜 대출 등 갖가지 비리 의혹이 드러나 우리를 실망시켰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의 모친이 서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2006년 이후 10년간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그의 모친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00만 원이 넘는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데도 법적 맹점을 교묘히 이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김 후보자가 고위 공무원이던 시절 수익 원대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는 동안, 정작 노모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자’였다니, 아무리 부모의 이혼으로 호적상 모자 관계가 아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변명도 참 군색하기 짝이 없다. ‘쫓은 해외 근무로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차상위계층 지원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 아닌가. 아들에게 돌아가야 할 의료비가 영동하게 93평 아파트에 사는 후보의 모친에게 지급됐다니 서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행태도 장관직에 어울리지 않는다. 조 후보자 부부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모두 36억 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액수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적 하자가 도저히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다. 이들 두 후보자는 야당 단독이긴 하지만 엇그제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처적 의견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그럼에도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전자결재를 통해 이들의 임명을 강행했다.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無 等 鼓

투기와 특혜, 인사 청문회만 열리면 신물나게 듣는 단어이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문화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정도가 심한 듯하다.

청문회는 고위 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지만 우리네 청문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 야당이야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만 야당은 갖은 의혹에도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번 후보자를 역시 국민 눈높이에서는 한참 떨어

진 저 먼 나라 사람들

세조의 관리 등용

의혹과 논란만이 두드러지고 있다. 게다가 국회의 의견이 청와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지라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인사가 만사’라 했듯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쓰는 일은 인사권자에게 가장 골치 아픈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 래도 조선시대 임금들은 나름대로 인재 선택의 묘안을 갖고 있었다. 그 중 세조의 아이디어는 간단하면서도 효을 적이었다.

세조는 각도 관찰사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농상(농사와 누에 치는

일), 목축, 제언(하천이나 계곡을 막아 물을 저장하는 댐) 등의 일 가운데 하나라도 능한 사람이 있으면 등용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을 찾아 보고하라.”

이 지시로 전라도 무장 현감이 천거했다. 현감은 농한기에 백성을 동원해 보를 쌓으려 했다. 그는 죽을 췌 주민들의 허기를 달래주고,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개천에 보를 쌓자고 설득한다. 다음해 가뭄으로 다른 지역에 서는 물 때문에 살인까지 났지만 무장

지방은 모두 모를 냈다. 세조는 그의 품계를 2등급이나 올려 주

었다. 충청도 육천에 사는 한 농민은 마른논 작파농법을 쓸 경우 잡초가 마구 자라 품이 많이 들고 가뭄에 취약하다는 점을 알았다. 그래서 논두렁을 3~4척 더 높여 겨우내 물을 저축, 봄이 되면 물을 아래로 보냄으로써 물을 심어 많은 생산을 했다. 그는 관리로 채용됐다.

장관을 임명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국민은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국민을 위해 주는 사람을 원한다. 청문회에서 그런 후보자를 보는 날이 과연 오기는 할까.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아동학대, 최선의 예방은 관심이다

여성이족부는 지난 2014년 8월 8일부터 매월 8일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보라데이’로 지정해 캠페인이나 행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보라데이’의 ‘보라’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주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함께 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가족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다른 범죄보다도 더욱 더 필요하다. 하지만 내 이웃이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 했어도 섣불리서서 그 행위를 막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 기엔 부담스러운 일이다.